

야3당 “100% 연동형 ·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의원정수 늘리되 세비 감축 지역 대 비례, 2대1 협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특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사항인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계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3당은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

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계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대기업 중대한 탈법 스튜어드십 코드로 책임”

문 대통령,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대기업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이와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다. 2개월 만에 회의를 또다시 주재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축인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모든 분야를 골고루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경제 기반을 닦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갑을 관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이를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의미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당부도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로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새해 전북경제 살리기 올인”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군산조선소 조속한 재가동 지엠 군산공장 활용 등 의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이 올해 전북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도당위원장으로서 군산 등 전북경제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힌 후 “올해는 반드시 전북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먼저 군산조선소 선박 물량 배정과 조속한 재가동, 지엠군산공장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 전북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안 위원장은 복지, 안전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가 당당히 활동하고 약취와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환경 조성, 여성인권과 노인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 신년 기자회견이 23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안호영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종 전복 혐인의 해법을 찾기 위해 14개 시군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예타 면제에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용역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전문인력과 정주여건 등 실질적 준비가 마련된 만큼 전북도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X 혁신역 신설과 관련한 최근 용역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호영 위원장은 “타당성 검증 결과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김제와 전주는 물론 익산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군산지역위, ‘군산대 약학대학 유치’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통)가 군산대학교의 약학대학 유치 희망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군산지역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수산생명과 해양바이오분야 그리고 화학과 생물학과등 기초과학 분야 약학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하는 지방의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약학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산대는 의대나 약대가 없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 의대 등으로 빠져 나가는 상황이어서 약학대학을 유치하면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